



부산 신항 대형선박 수리조선소 건설 이견으로 난항

조선업계, 대형선박 신항유치차원 정책적인 지원필요

부산 신항 대형선박 수리조선소 건설문제에 대한 업계와 정부간 이견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측에서는 수리조선소가 현재로서는 신조선 건조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앞으로 신항에 대형선박들이 더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정부측에서는 타업종과의 형평성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부산항경쟁력촉진협의회는 9월20일 오전 8시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끝단에 대형선박 수리조선소 건설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차가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정부가 기반시설을 지어주면 그 위에 민간이 조선소를 건립하겠다는 업계의 입장과 철저히 민간 투자로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회의 막판까지 평행선을 그었다.

한국해양대 오진석(선박전자기계공학) 교수가 해운항만업 조선기자재산업 등과의 전후방 연관 효과를 들며 수리조선소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확인섭 부산해양수산청장은 “분석에 따르면 17년 이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데 이 정도라면 정부 지원 없이 민간부문에서 전액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수리조선소의 위치도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을 동일하게 놓고 분석해 봐야 하기 때문에 수리조선소를 조성하게 되더라도 반

드시 부산에 조성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김성태 동일조선(주) 사장은 “부산항의 미래를 보고 수리조선소를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생각해 달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최근 한해 국내에서만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선박이 300대 이상 건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리조선소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대표도 “부산항에서 선박이 유류와 선용품, 수리 등 세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져야 경쟁력이 생긴다”면서 경제성만 따진다면 모든 조선업체들이 신조선으로 가야 하겠지만 허브항으로서 부산의 경쟁력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었다.

이처럼 민간과 정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허남식 부산시장이 “민간이 수리조선소를 건설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재정지원해 줄 수 있는냐는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정부, 부산항만공사가 충분히 논의한 뒤 용역방안을 검토하자”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